

옥상은 위험지대...관리 허술에 추락사 잇따라

규정상 난간 높이 1m20cm...얇은 울타리 펜스 넘어가기 쉬워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 한정돼 실효성 떨어져

최근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0분께 순천시 왕지동 한 아파트에서 A(5)군이 23층 높이의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해당 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했으며 평소에도 자주 옥상에 올라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육아도우미가 엘리베이터에서 자전거·유모차 등을 꺼내느라 알아채지 못한 사이 홀로 옥상으로 올라갔으며, 옥상 난간을 딛고 올라갔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상가 건물 5층 옥상에서 중학생 B(14)군이 추락해 숨졌다. 당시 B군은 과자와 라면, 음료 등을 가지고 친

구들과 놀기 위해 옥상에 올라갔는데 건물 옥상과 옥상 사이를 뛰어 넘어가려다 발을 헛디뎠다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간격으로 추락 사망사고가 두 차례 발생한 자 옥상 관련 안전관리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건축법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옥상 난간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m20c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별도의 안전조치는 규정돼 있지 않다.

순천에서 사고를 당한 A군은 키가 약 1m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시 옥상에 A군의 추락을 막아 줄 장치는 1m 30cm의 얇은 울타리 펜스가 전부였다. 펜스는 가로로 된 쇠살 형태라서 A군이 쉽게 기어올 수 있는 구조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광주시 서구의 상가건물도 마찬가지였다. B군의 키는 1m 70cm 정도였는데 옥상 난간은 1m 20cm 높이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

옥상 출입문에 대한 법규도 허술하다. 지난 2016년 옥상으로 원활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화재 발생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청소년 비행, 자살사고, 물건 투척, 외부인 침입 등 각종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평상시에는 폐쇄되지만, 화재 발생시 대피 공간 활용을 위해 개방되는 장치다.

지난해에는 주택건설기준 규정과 건축법 개정에 따라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1000㎡ 이상 공동주택, 옥상 헬리포트 설치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등을 새로 지을 땐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아직 설치 의무화 대상이 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2016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나 일반건축물,

저층 건물은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광주시에 있는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 12만 5278동 가운데 10년 이상 지난 건물은 9만 2953동으로 약 74.19% 이상이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실제로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된 뒤에도 추락사고는 줄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매년 30여건 안팎의 옥상 추락사고가 접수돼 왔다. 다만 2017년 32건, 2018년 35건, 2019년 42건, 2020년 33건, 2021년 38건 등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로도 추락사고는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철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건축법 기준을 만들 당시 국민 평균 신체 사이즈를 기반으로 옥상 난간 규정을 만들어 지금과 많이 다르다"며 "변화된 신체 기준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천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위기가구 발굴 집배원 광주 북구-전남우정청 협약

광주시 북구 우체국 집배원들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다.

북구는 21일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공익재단과 '복지위기구편 사업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집배원이 위기의심 가구에 등기우편을 배달하며 해당 가구에 우편물이 쌓여 있는지, 집에서 약취가 있는지 등을 파악해 구청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북구는 복지급여 탈락자, 공과금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300여 가구를 매달 선정해 복지정보를 담은 등기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다.

북광주우체국 소속 130여명의 집배원이 위기가구발굴단으로 위촉된다.

행정복지센터는 이렇게 발견된 위기가구에 대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사학정책 변화 오나

이정선 교육감, 사학법인 간담회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야"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과 소통에 나서 정책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19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교육감과 함께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이 공개적으로 사학법인 이사장들과 자리를 함께 한 것은 이례적이다. 행사에는 광주 36개 학교법인 가운데 28개 법인이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광주는 고교의 경우 사학의 비중이 매우 높다. 사학과 공립의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하고 학생 입장에서 특히 공·사립의 구분은 별 의미가 없다. 사학도 광주교육의 소중한 자산이며, 앞으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 실제 광주지역 일반계 고교 53개교 가운데 37개 학교(70%)가 사립이다.

이 교육감이 사실상 사학의 존재를 인정하고 동반자적 관계를 강조함에 따라 사학 정책기조가 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날 민감한 현안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도 이뤄졌다.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정책과 사학기관 운영 평가'는 장휘국 전 교육감이 추진한 사립정책의 핵심사안이다. 장 교육감은 광주시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에 대응하기 위해 시교육청에 교원 채용을 위탁한 사립학교를 선별 지원하는 정책을 폈다. 사립학교 법인과 학교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사학기관

운영평가도 통제 정책의 하나였다.

사학법인 이사장들은 이 자리에서 교원채용, 사학기관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소통강화 방안, 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지원 방안, 학교법인 및 설치·경영 학교 운영의 애로사항 등을 건의했다.

이 교육감은 "사학의 자율성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장하겠다. 사학도 공공성과 책무성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한 뒤 "교원 채용, 관리자 채용 등 다양한 인사와 학교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공식 건의나 제안을 해주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단 시교육청의 사학정책 변화가 감지되지만 전교조 등 진보교육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강화와 제재를 촉구하고 있어 시교육청의 행보가 주목된다.

/유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페트병 재활용방법 익히며 20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3단지 옆 광장에서 열린 동운마을 기후환경 연합공동체 출범식에서 어린이들이 인공지능 자원순환 무인회수기 시연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교육부장관 부재에 전남교육청 부교육감 '장기 공식'

도의회 "중앙정부와 교육정책 중요한 가교역할" 임명 촉구

교육부장관 부재에 따라 전남교육청 부교육감 자리가 장기간 공백이 생기면서 지역 교육계에서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자로 김천홍 전남교육청 부교육감이 교육부 대변인으로 전보된 이후 아직 후임 부교육감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전남교육의 핵심 책임자인 부교육감이 한 달 이상 장기 공식인 경우는 이례적인 일로, 전남도교육

청은 일단 정책국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원활한 업무추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교육감은 도교육청 내 각종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6급 이하 일반직 인사 전결권을 갖고 있다.

부교육감 공식 장기화에 대해 전남도의회에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조옥현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9일 교육청 결산심사 회의에서 "부교육감은 교육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 정책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2023년 예산편성, 행정사무감사 등을 앞두고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 및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해 조속히 부교육감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이 같은 부교육감 공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곳은 전남교육청 뿐만 아니라 경기, 세종, 충북 등 4개 시도교육청에 이른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연이은 참사 현대산업개발 강한 행정조치를"

광주 동구의회, 서울시에 촉구

광주 동구의회 의원들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한 엄중한 행정처분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광주 동구의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참사가 발생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라는 참담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토부가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을 권고했으나 서울시는 결정을 미루고 있어 최소한의 행정처분으로 끝날 수 있는 우려가 있

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동 참사로 8개월 영업정지(부실시공)와 8개월 추가 영업정지(하수급 관리의무 위반) 처분을 내린 서울시가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는 현산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했다"며 "불신과 의혹의 시선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잇따른 붕괴 사고를 낸 현산에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권고를 서울시는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방고객 확보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MG골프클럽

| 구분 | 이용 기간 | 정상 이용료 |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가 (원) | | |
|-------|-------|-----------|---------------------|--------------|--------------|
| | | | 30점 이상 (10%) | 40점 이상 (15%) | 50점 이상 (20%) |
| 정기 회원 | 1개월 | 200,000 | 180,000 | 170,000 | 160,000 |
| | 3개월 | 570,000 | 513,000 | 484,500 | 456,000 |
| | 6개월 | 1,080,000 | 972,000 | 918,000 | 864,000 |
| | 12개월 | 2,040,000 | 1,836,000 | 1,734,000 | 1,632,000 |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5층 MG문화센터 회원 대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